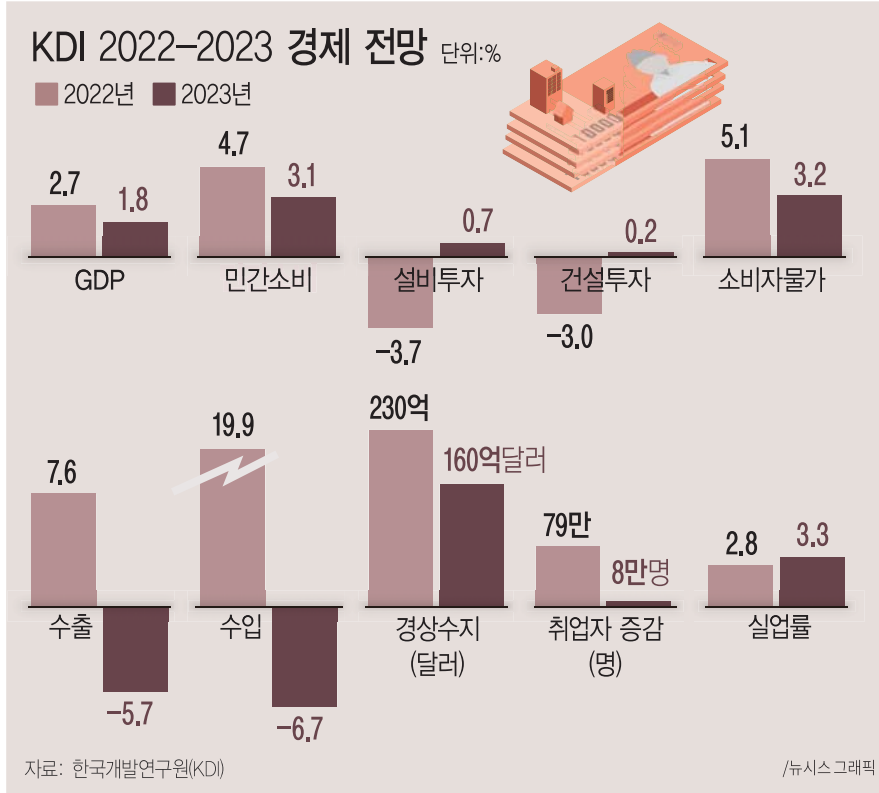
2% 성장률 마감… 韓 경제, 내년 1%대 저성장 늪 빠진다

한국개발연구원, 내년 1.8% 전망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과 함께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하강 예측

에너지·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률 3.2% 예상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2%대 성장을 마감하고, 1.8%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과 함께 수출 증가세 둔화로 한국 경제가 급격한 하강 국면을 맞아 1%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에너지·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내년 소비자물가는 2.2%에서 3.2%로 오를 전망이다.

KDI가 1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8%로 지난 5월 전망치 2.3%보다 0.5%포인트 낮췄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 2.6%보다 0.8%포인트 낮다.

주요 대내외 기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 국제통화기금(IMF) 2.0%, 아시아개발은행(ADB) 2.3% 그리고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 각각 2.1%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년 성장률은 대외여건 악화, 투자와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금리 인상 등을 반영한 결과"라며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가장 많이 둔화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서서히 회복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3.2% 상승이 예상된다. 지난 5월 전망치 2.2%보다 1.0%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정 실장은 "내년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등이 예상보다 더 물가에 반영된 영향"이라며 "국제유가 안정세로 물가가 올해(5.1%)보다는 상승 폭이 축소되겠지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당 폭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이 맞물려 1.6%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소비는 3.1%, 설비투자는 0.7% 증가에 그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내년 고용시장도 위축돼 취업자 수는 올해(79만 명)보다 대폭 줄어든 8만 명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아울러,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7%로 제시했다. 소비자물가는 5.1%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거나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더욱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높은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둔화 가능성도 잇어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위축을 완화하고, 고령층과 외국 인력 활용 방안 등 생산성을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자율주행차 '로보라이드' 강남도로 달린다

자율주행 레벨4 기술 고도화 실증
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확대운영
체험단, 카카오T로 차량 호출·이용

카카오T를 이용해 로보라이드 차량을 호출하는 모습.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자동차기업의 미래 격전지인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 속도를 높인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경쟁력 지표인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기술은 기업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중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완성차 업체 뿐 아니라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까지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자율주행 레벨 4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 사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운영 중인 자율주행 카헤일링 시범 서비스 '로보라이드'를 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현대차·기아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율주행 실증 사업이다.

현대차·기아는 강남 지역에서 운영 중인 로보라이드 시범 서비스에 차량을 추가 도입하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플랫폼과 연동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도심 속 자율주행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고, 향후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우선 임직원으로 구성된 체험단을 대상으로 로보라이드 서비스를 운영해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선발된 임직원은 카카오T 앱을 통해 로보라이드 차량을 호출하고 이용할 수 있다.

또 현대차·기아는 향후 일반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지역을 강남 도산대로, 압구정로 일대 등으로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자율주행사업부장 장웅준 전무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해 처음으로 론칭하는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기술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이동연구소 부사장은 "강남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고도화된 도심 환경으로 꼽히는 곳으로, 현대차·기아와 협업을 통해 도심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쌓아온 플랫폼 기술이 자율주행의 서비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지난 6월 진모빌리티와 협업해 서울 강남 지역에서 로보라이드를 처음 선보인 바 있다. 현재까지 천여명의 임직원이 로보라이드 서비스에 가입해 도심 환경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尹 전용기에 MBC 탑승 불허… 언론단체 "언론탄압" 반발

대통령실 "외교 왜곡·편파 반복
취재편의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

MBC "구제절차 통해 입장 밝혀야
언론 보복, 새로운 형태의 언론탄압"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10일 대통령실 앞에서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에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시아 순방 출국을 앞두고 문화방송(MBC) 출입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가운데, 야권은 물론 언론단체도 잇따라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긴급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9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순방에서 MBC 취재진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MBC 출입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MBC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로 보고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MBC는 "특정 언론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신청 등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제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합의하고 구축해온 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언론탄압이라고 여겨지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MBC는 전용기 동행 취재를 불허에 대해 별도의 여객기 티켓을 확보하는 등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취재할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에 현업언론단체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윤석열 정부와 전면 전도 불사할 것임을 선언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이번 사안은 진영을 뛰어넘어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오늘 MBC를 겨눈 윤석열 정부의 폭력을 용인한다면 내일 그 칼끝은 언론계 전체를 겨눌 것이며, 피 흘려 쌓아온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기틀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